

미분양 급감…광주 준공 아파트중 121가구만 남아

작년의 10%대로…전국서 가장 적어

치솟는 전세가 영향 매매수요 기지개

광주지역의 일반 미분양 및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이 전국에서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일반 미분양 주택은 전달보다 크게 줄면서 안정세를 보였다. 전세 가을(매매가격 대비 전 세가격)이 타 지역보다 높은 데에 주택 매매수요가 많았다는 분석이다.

26일 국토교통부가 내놓은 '전국 미분양주택 3개월 연속 감소' 자료에

따르면 올 11월 기준 광주지역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121가구로 전달보다 40가구(24.8%)가 감소하며 전국

에서 유일하게 200가구 미만을 기록했다. 6대 광역시인 부산(1054가구), 인천(2596가구), 대구(1015가구), 대전(624가구), 울산(597가구)과 비교해도 수치가 낮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큰 폭으로 감

소하고 있다. 지난해 말 3348가구였던 미분양 주택은 지난 6월 1238가구로 또 떨어진 뒤 매달 조금씩 감소해 9월 913가구, 10월 817가구를 기록한 데 이어 11월엔 377가구까지 줄었다.

세종시를 제외하고 전국에서 가장 적은 편이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광주지역에 수년 새 신규 물량이 많지 않았던 데다

남은 물량의 분양이 수월해지면서 공급보다 수요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을 내놓았다. 전세가격이 매매가의

80%에 육박하는 높은 전세가을 탓에

미분양 주택이 줄었다는 말도 나온다. 2015 유니버시아드 대회 선수촌 조성과 관련, 대규모 이주 수요가 발생한 점도 꾸준히 영향을 미쳤다.

실제 아파트 과잉공급이 일어난 2008년 12월 기준 광주의 준공 후 미분양 주택은 5552가구에 달했지만 2010년 12월엔 1066가구로 줄었고,

2011년 12월엔 249가구까지 떨어진 뒤 올해 들어서도 꾸준히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일반 미분양 주택도 2008년 12월 1

만2384가구나 있었지만 4년 뒤인

2012년 12월 3348가구까지 감소했

고, 올해 들어 3000가구 가량이 또 다시 줄어들었다.

전남지역의 일반 미분양 주택은 11월 기준 2065가구로, 전달(1829가구)보다 236가구(12.9%) 증가했으며 준공후 미분양 주택도 전달(513가구)보다 소폭 늘어난 592가구를 기록했다.

한편, 전국 미분양 주택은 6만3709가구로 전달(6만4433가구)보다 724가구가 줄어, 3개월 연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8·28 부동산 대책 등의 영향으로 전달에 비해 미분양이 큰 폭으로

감소했기 때문이다.

/임동률기자 exian@kwangju.co.kr

농협 광주본부 소외계층 치료비 전달

광산구 4명에 '사랑의 1004운동' 모금액 지원

농협 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는 2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청(청장 민형배)에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성금 1,000만원은 '농협 사랑의 1004운동' 모금액으로 지원되며, 광산구에 거주하는 '긴급지원·대상 제외자와 사례관리대상자 등과 같이 도움이 절실했던 사회부여 계층 4명에게 전달됐다.

'농협 사랑의 1004운동'은 광주관내 농협 임직원들이 자발적인 성금

을 모아 난치성질환 치료비 등을 지원하는 대표적인 사회공헌활동으로 현재까지 총 166명에게 1억8600만원을 지원했다.

박태식 본부장은 "앞으로도 농협은 다 같이 잘사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지원, 다문화가정지원, 장학사업 등을 펼쳐 어려운 이웃에게 희망과 꿈을 심어주는 지역사회에 선도적인 역할을 다 하겠다"고 밝혔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농협광주본부(본부장 박태식)는 지난 24일 광산구청에서 지역 소외계층에 대한 수술·치료비 1000만원 전달식을 가졌다. <광주농협 제공>

광주·전남 12월 소비심리 '꽁꽁'

전달보다 4P 하락…9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경제상황에 대한 심리를 종합적으로 나타내는 소비자심리지수가 9개월만에 기준치(100)이하로 내려간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한국은행 광주전남본부가 최근 광주·전남지역 도시가구 6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한 '2013년 12월 광주·전남 지역 소비자동향 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비자심리지수는 99로 전달보다 4포인트 하락했다. 이는 지난 3월(99) 이후 9개월만에 기준치 이하로 떨어진 것이다.

소비자심리지수가 100 이하면 경기를 비판하는 이들이 낙관하는 쪽보다 더 많고 100 이상이면 낙관하는 소비자들이 더 많다는 의미다. 현재 생활형편CSI는 89로 전달대

비 2포인트, 생활형편CSI도 94로 전달대비 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가계수입전망CSI는 97로 전달대비 2포인트, 소비자출전망CSI도 106으로 전달대비 5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현재경기판단CSI는 76으로 전달대비 7포인트, 향후경기전망CSI도 86으로 4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취업기회전망CSI는 87로 전달대비 2포인트 하락했고 금리수준전망CSI는 96으로 3포인트 상승했다.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들의 현재가계저축CSI는 85, 가계저축전망CSI도 91로 각각 전달과 동일했으며 현재가계부채CSI는 108로 전달대비 4포인트 상승한 반면, 가계부채전망CSI는 102로 전달대비 1포인트 하락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오늘부터 만 19세도 주택청약 가능

주택 공급 개정안 시행

앞으로 만 19세 이상이면 주택청약이 가능해지고 보금자리주택, 다자녀·노부모 특별공급에도 소득·자산 기준이 확대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 5회까지만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놓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 5회까지만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놓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 5회까지만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놓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 침체 등으로 아파트를 나눠서

분양하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총 4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300가구 이상, 3회까지만 허용했으나 앞으로는 200가구 이상 아파트 단지에서 최소 50가구 5회까지만 분할해서

판매할 수 있다. 또 준공(사용검사) 후 2년 이상된 아파트를 전월세로 내놓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받되 청약통장 가입자를 대상으로 한

공개 모집 대신 선착순 분양이 가능하도록 고쳤다.

건설사가 주택 당첨자에게 개별적으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제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재건축 사업을 하면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절차를 따르지 않고 건축허가를 받아 주상복합아파트를 건설하는 경우 조합원에게 가구당 1주택을 우선 공급 할 수 있도록 했다. 종전에는 1가구 1주택 우선 공급 제도가 없어 재건축 등으로 주상복합아파트를 짓는 경우 해당 아파트 입주를 보장받지 못했다.

/연합뉴스

국토부는 이와 같은 내용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27일 공포·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종전에 만 20세 이상이던 주택 청약 가능연령이 만 19세로 낮아진다. 이는 지난 7월 민법 개정으로 성년의 기준이 만 20세에서 19세로 낮아진 점을 반영한 것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청

년층의 주택청약 문턱이 낮아지고 주택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건설사의 아파트 분할모집 요건도 완화된다. 분할모집은 건설사가 분양 시장